

일본정부의 암호화폐(Crypto currency)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과 시사점

김현정*

Policy Trends and Issues on Crypto Currency of Japanese Government

Hyun-jung Kim*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ong-A University, Busan, 49236, Korea

요 약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치 영역은 다양해지고 있다. 암호화폐는 기존 통화가 작동하지 못했던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월부터 2016년까지 송금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대표코인인 비트코인(Bitcoin)을 공식 통화로 인정하고 최근 관련 규제 정책을 주도 해 왔다. 이 논문은 암호화폐 통화 시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 전략을 검토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전략특명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과 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세제의 개정 및 규제 조직의 수립 과정 그리고 관련한 보충 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Blockchain technology could represent a solution to unexpected problems. In modern society, the domain of value has become diversified. The Crypto currency would replace the area that conventional currency could not function.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the Bitcoin as an official currency from April 2017 through amendment of the Money Transfer Act in 2016, and has been leading the related regulation policy recently.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y strateg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is leading the current policy related to the Crypto currency market. The sequenc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Coordination Process of Japanese Government's Crypto currency Policy of Special Mission Committee on IT Strategy as a Coordinator, Amendment of the Fund Settlement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Self-Regulation Organizations in Crypto currency and Japan's Crypto currency Taxation and Supplementary System.

키워드 :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 IT전략특명소위원회

Key word : Blockchain, Crypto currency, Bitcoin trading, Special Mission Committee on IT Strategy

Received 21 June 2018, Revised 4 July 2018, Accepted 26 July 2018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HyunJung Kim(E-mail:hjkim0111@dau.ac.kr, Tel:+82-51-200-8683)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ong-A University, Busan, 49236,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18.22.10.1398>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I. 서론

비트코인은 등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암호화폐는 분산된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해 신뢰성을 높이는 ‘블록체인’, 즉 분산식 신탁 메커니즘을 통해 생성되고 공급된다.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그는 암호화된 화폐를 개발하면서 2,100만 비트코인이라는 총량을 설정해 두었다. 한정된 수량으로 설정된 비트코인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풀어 화폐를 채굴하는 방식으로 공급됨에 따라 이해관계가 설정된다. 채굴(mining)하는 집단의 채굴파워(hash power), 각 거래소,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 코인보유자(stake holder) 집단에 의한 이해관계가 코인의 가격을 결정짓고 변화시킨다.

이러한 토대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거래 규모는 2017년 12월 8일 현재 시가총액 3000억 달러에 이른다.¹⁾ 이와 같은 거래 급증 및 시총 증가에 따라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규제를 정리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 정부는 2014년 이미 비트코인을 제도권 화폐로 편입시켜 정부 주도의 거래 허브를 구축하였다. 유럽연합(EU)에서는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 2015년 10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비트코인이 ‘상품’이 아니라 ‘화폐’임을 인정한 판례로 규정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화폐 지위 인정에 관한 문제는 개별 회원국 관할이라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미국은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해 왔으나, 지난해 명확한 과세 규정을 공표함으로써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일본정부는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2017년 4월부터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인정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관련 규제 정책 부문을 선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관련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정책 전략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일본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조정 과정에 대해

1) 해당 통계는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을 알려주는 코인마켓캡닷컴(coinmarketcap.com)에 의한 것이며, 현 시점 시가총액이 1억 달러를 넘는 가상화폐만 따져도 70종이 넘는다.

조정자로서의 IT전략특명소위원회(Special Mission Committee on IT Strategy) 그리고 자금결제법(Fund settlement) 개정 및 암호화폐 자율규제기관의 설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III장).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 및 부가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IV장).

II.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블록의 연결된 상태란 의미다.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진행된 상황을 암호화하여 생성된 블록을 계속하여 연결해 나가는 것이다. 모든 진행된 상황은 암호화되어 블록에 기록되며, 각 블록은 시간별로 전자 봉인 된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생성된 블록체인은 전세계 각 컴퓨터에 동시에 공표되어 기록된다는 것이다.[1] 블록이 생성되는 짧은 시간 내 이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 연산을 해킹하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에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증명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 기술은 기존의 정보 네트워크 인터넷의 활용 범위를 한층 넓혔다. 우리는 이메일을 통해 각종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낸다. 실은 우리가 보낸 것이 정보와 자료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이메일은 편리한 기술이지만, 보내고 싶은 것이 자산 가치를 저장한 내용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돈이나 주식을 복사해서 이메일을 통해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자산 가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우리는 개인 간의 자산이동을 매개해 주는 은행,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이 매개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를 지불하고 어떤 때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상에서는 서로 모르는 익명 상태의 개인과 개인 간 자산의 거래가 가능하다.[2] 기업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점점 커지고 있다.[3]

1세대 블록체인이 자산 가치의 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2세대 기술은 참여자 간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이동시킬 수 있는 가치의 영역도 확장시켰다. 우선 현대사회에서 자산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지식재산권 등이다. 예컨대 가요 등 음악 자산의 경우 20세기까지는 음반 혹은 CD라는 재화로 판매

되었으나, 현재는 디지털 음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저작권자가 생성한 음원이 더 쉬운 방법으로 배포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나, 지식재산권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자산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제 개인 작곡가는 블록체인에 음원을 올리고 구매자와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음원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합당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은 국가 혹은 지자체가 진행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에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영유아지원, 장애활동보조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조금이 은행과 연계되어 발급된 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불편함을 블록체인 기술이 대체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동 기술은 행정 혁신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경기도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심사 과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은 뜻밖의 문제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가치의 영역도 다양해졌다. 블록체인 생성 과정에 참여한 채굴자 혹은 보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대가인 암호화폐는 기존의 화폐가 기능하지 못한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개인의 경험이나 노하우, 자신이 알게 된 정보 등을 꼼꼼히 기록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가치다. 몇 번은 선의에서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곧 시들해지거나 파워블로거로서 의도가 왜곡되어질 때도 있다. 만약 축적된 경험 혹은 정보가 담긴 소중한 글이 가치로 인정되어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다면 인터넷 공간은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받을 것이다. 특정 암호화폐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보 글을 쓰는 공간에서 지지를 받은 정도에 따라 보상으로 주어진다. 또 다른 예로 각 가정의 컴퓨터는 대부분 하드웨어 여유 공간을 가진다. 이 여유 공간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 제공하여 대가를 지불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은 기존의 지불체계로는 미흡하거나 대체하지 못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 영역 등 다양한 분야로 쓰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의 인터넷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가치의 인터넷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 우리 사회는 이에 합당한 제도와 정책의 마련을 통해 혁신을 주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I. 일본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조정 과정

3.1. 조정자로서의 IT전략특명소위원회(Special Mission Committee on IT Strategy)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자 주요국 정부들은 이에 대한 규제 및 정책대응에 나섰다. 특히 일본에서는 2014년 2월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곱스 사태가 발발하여 정책 마련이 필요한 계기가 되었다. 마운트 곱스(Mt. Gox)는 비트코인의 소실 또는 예금잔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민사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지만 같은 해 동 신청이 기각되어 파산절차에 이르렀으며, 피해 진위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태이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위 사태 발발 몇 개월 후, 일본 집권세력 자민련은 태스크포스팀인 'IT전략특명소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비트코인을 민간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무리하게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을 모았다. 동 위원회는 우선 "비트 코인을 비롯한 가치 기록"에 대응 관련 [중간보고] "2)(2014년 6월 19일)를 공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우선 비트코인 등의 기술 및 사용과 거래에 관한 영역을 '가치 기록'이라는 명명하였으며, 선불 식 지불 수단(암호화폐), 통화, 물건도 아닌 새로운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의 과세 기준 및 기존법과의 관계에 관해 논의된 바를 기록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기본 개념 : 자기 책임과 도전 정신 규제하지 않고 따뜻하게 사업을 지킴
- ② 정의: '가치 기록'(값이 있는 전자적 기록의 뜻)라고 하고 통화도 물건도 아닌 새로운 분류로 규정함
- ③ 기존 법과의 적용 관계: 출자법(예탁금 규제) 은행법(외환 거래)· 자금 결제 법, 범죄 수익 이전 방지 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 ④ 단체설립 지침: 단체를 설립에 관한 지침 (신고제도· 본인 확인· 정보 공개· 보안)을 스스로 책정하고,
- ⑤ 과세: 통화와 '가치 기록' 간, '가치 기록'과 물건 간, '가치 기록'끼리의 교환서비스에 소비세를 과

2) 해당 문건의 정식명칭은 'ビットコインをはじめとする「価値記録」への対応に関する【中間報告】'이며, 문건 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세(매입 세액 공제 가능), ‘가치 기록’ 판매에 따른 자본 이득 과세[4]

‘IT전략특명소위원회’는 이상의 간략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며, 향후 시장의 변화 및 외국 규제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것이라 언급하여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규율하고 자정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기관의 설립을 촉진하였다.

3.2. 자금결제법(Fund settlement) 개정 및 암호화폐 자율 규제기관의 설립

2014년 9월 비트코인 사업자들은 ‘IT전략특명소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후원을 토대로 ‘일본디지털자산협회(JADA: Japan Authority of Digital Asset)’를 발족하여, 암호화폐에 관한 자체 규율 제시 및 자정활동에 나섰다. JADA는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 중심으로 설립된 협회로, 암호화폐 관련 표준 및 협회 구성원들의 행동규범(Codes of conduct) 제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해당 기구는 2016년 4월 이후 일본블록체인협회(JBA: Japan Blockchain Association)으로 개편되었다. JBA 자체 규율 하에서 일본의 거래소들은 익명 거래를 차단하며 자금 세탁으로 의심 가는 거래는 규제 당국에 보고하기로 했다.

표 1은 자금결제법 개정안 주요내용이다. 2016년 5월 25일 일본정부는 암호화폐를 양성화하기 위한 ‘자금결제법(Fund settlement)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고, 안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협회들을 출범시켰다. 본 장에서는 이의 과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자금결제법은 암호화폐에 일반화폐 기능을 부여하고, 음성적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하에 마련되었다. 동 법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과 같은 가치(Asset-like values)’로 인정하고 있으며, 규제 및 감독에 관해 금융청 행정명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표 1 참조).

Table. 1 Main contents of amendment on Fund settlement[5]

Character	Main contents of amendment
Admission on currency function	Admit Crypto currency as 'Asset-like values'

Character	Main contents of amendment
Regulation and Inspection	Designate the Japanes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as a virtual monetary supervisory authority and require Crypto currency exchange to register in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 Authorize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to carry out on-site inspections of the Crypto currency exchange and, if necessary, to enforce regulations through administrative orders - Mandatory activities to prevent the Crypto currency from being abused for money laundering, fraudulent transactions and terrorist financing

암호화폐 관련 자율규제 단체였던 JADA는 기술부문 인 블록체인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자 JBA로 개편되었다. 동 기구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청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JBA는 다음의 주요활동을 수행한다.

- ①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 인프라 응용, 정책 제언, 암호화폐 교환 거래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및 감사
- ② 블록체인 관계 부처(경제 산업 성, 금융 기관, 소비자 청, 경찰청, 국세청 등) 및 가입(전국 은행 협회 등)과의 연계 및 의견 교환
- ③ 블록체인 사업자 간의 교류·정보 교환·연구회의 개최
- ④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신규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 ⑤ 일본 국내에서의 PR 등의 블록체인 관련 이벤트 주최
- ⑥ 해외의 블록체인 사업자 단체와의 정보 교환 및 협력
- ⑦ 일본 국내의 암호화폐 사업자 단체 및 블록체인 관계 단체와의 정보 교환 및 협력[6]

아래 표 2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JBA와 블록체인 협업컨소시엄(BCCC: Blockchain Collaborative Consortium)에 관한 비교설명이다.

Table. 2 Main features between JBA and BCCC Association[7]

Character	JBA	BCCC
Date of composition	April 15 th 2016	April 25 th 2016

Character	JBA	BCCC
Purpose	- Crypto currency, self-regulation of Blockchain - Connect between relevant ministries, agencies and companies	-Share Blockchain technology and sharing case -Foster a Blockchain technical expert
Composition	-Total 36 companies related to Crypto currency, Blockchain, etc. - Participate in Financial Institutions and National Assemblymen	Total 168 companies centered on Blockchain technology companies (as of January 2018)
Main content	-Suggest Policy on Crypto currency and Blockchain - Develop guidelines for related companies - Connect between relevant ministries, agencies and companies	-Promote to develop technology and fund the investment -Share practical Blockchain case -Foster a Blockchain technical expert

BCCC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보급, 전문가육성 및 자금지원 등 기술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업체들에 의해 출범하였다.³⁾ BCCC에는 블록체인 기술업체 중심으로 2018년 1월 현재 168개 기업(출범 당시 34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보급·실용·기술·운영위원회로 구성되었다. 동 기구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자금지원 및 투자를 진행하며, 블록체인 관련 기술 보급 및 실제 적용사례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블록체인 대학교’를 설립하여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IV.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 및 부가제도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의 문제,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등 관련 사업에 대한 과세 및 금융기관으로서의 회계처리 및 규정의 문제, 셋째, 암호화폐를 이용한 조세피난, 외환유출 등 범죄 예방에 관한 문제, 넷째, 블록체인 및 거래소 해킹 방지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각 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정착을 위해 과세 문제에 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 및 제도권 내 정착한 암호화폐 관련 부가제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4.1. 암호화폐 과세

일본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⁴⁾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거래를 허용하는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7년 4월 일본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화폐 및 지급수단이 아닌 일반상품(Commodity)으로 규정한 데 반해 전향적인 조치이다.

대표적으로 일반상품 과세 규정인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은 경우, ② 암호화폐를 채굴한 경우, ③ 암호화폐를 받고 물건을 판매한 경우 Income Tax를 부과한다. ④ 암호화폐를 무료로 받은 경우 (에어드롭) GIFT로 세금에 포함하여 Income Tax를 부과한다. ⑤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 또는 현금으로 교환한 경우 Capital Gain/Loss로 규정 1년 이내 단기투자는 수익의 25%, 1년 이상 장기투자는 수익의 3단계로 10/15/25%의 가변 세율로 적용한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8] 표 3은 암호화폐 과세 체계에 관한 미일 간 비교 자료다.

Table. 3 Comparison of Taxation System of Crypto Currency in the US and Japan[9]

the US		Japan
Income Tax	Variable Tax	Progressive Tax
-Receive their wages	-Exchange Crypto	-less than 1.95 million ¥- 5% 0 ¥
-Mine	currency to other	-1.95 million ¥ to less than 3.3 million ¥- 10%
-Sell the goods using Crypto currency	Crypto currency of cash	-3.3 million ¥ to less than 6.95 million ¥- 20%
-Acquire Crypto currency for free		-6.95 million ¥ to less than 9 million ¥- 23%
		-9 million ¥ to less than 18 million ¥- 33%
		-18 million ¥ to less than 40 million ¥- 40%,
		-more than 40 million ¥ - 45%

3)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일본의 가상화폐 이용확대를 위한 추진동향,” <https://www.fsec.or.kr/common/proc/fsec/bbs/42/fileDownload/463.do> (December 10, 2017)

4) 법정화폐는 상품가치의 척도, 유통수단(교환의 매개), 가치 저장수단, 지불(결제)수단 그리고 세계화폐(국제거래수단)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은 2016년 3월 4일 ‘A bill to revise some of the banking laws and other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progres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⁵⁾을 국회에 제출하여 기존의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이를 매매 및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10] 그동안 소비자가 엔화로 가상화폐를 구매할 경우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처럼 소비세를 내야 했으나,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인정되면서 엔화로 가상화폐를 살 경우 소비세는 사라진 대신 가상화폐로 실제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엔화로 살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세를 내게 된다.[11] 이익 구간별 세율은 소비세 기준에 따라 195만엔 이하 - 5% 0엔, 195만엔~330만엔 이하 10%, 330만엔~695만엔 이하 20%, 695만엔~900만엔 이하 23%, 900만엔~1800만엔 이하 33%, 1800만엔~4000만엔 이하 40% 그리고 4000만엔 이상 45%에 이른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나 거래로 얻은 소득은 소득 신고에 포함해야 하고 투자자 과세 구간에 따라서는 최고 세율인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장기 보유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2017년 11월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기업의 보유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규칙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회계연도부터 기업이 소유한 가상화폐는 기업의 보유자산이 되며, 가격 변동에 따른 가상화폐의 평가손익이 회계보고서에 반영된다.

4.2. 암호화폐 관련 부가제도

암호화폐 가격을 바탕으로 한 옵션 및 선물 상품 출시는 CFTC와 관련된 규제(Commodity Exchange Act, CFTC Regulations)를 토대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가하였다. 지난 2017년 12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의 거래가 개시되었다. 미국에서처럼 일본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도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2017년 6월에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프라이어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보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이 제공하는 해당 상품은 거래와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 즉 거래소 해킹 등으로 야기되는 손실로부터 고객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1000만 엔에서 10억 엔까지 해킹이나 절도에 의한 손실을 보

전해 줄 수 있다고 한다.[12]

일본 최대 은행 인 도쿄 미쓰비시 (Tokyo Mitsubishi UFJ Ltd.) 은행은 곧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세계은행이 될 것이다.[13] MUFG(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coin은 기존 통화들과의 환율 변동폭이 큰 비트코인과는 달리, 1 MUFG coin을 1¥으로 1:1 환율 적용할 예정이다. MUFG coin과 ¥화 및 외화간의 환전 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며,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및 선불전자화폐 형태로의 지원 그리고 MUFG coin 전용 2-way ATM을 보급해 나아갈 예정이다.[14] 일본 투자 리서치 기업이자 비트코인 교환 업체인 피스코(Fisco)는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5] 작년 동 기업이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 한 후, 새로운 암호 기금은 비트 코인 및 기타 디지털 통화에 3억 엔 (266 만 달러) 이상을 투자 할 것이다.[16]

V. 결 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높은 유동성과 낮은 거래비용, 이용자의 익명성 보호, 거래수단의 혁신이라는 장점을 인정받아 왔다. 암호화폐는 기존의 어떤 화폐나 거래수단보다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의 활용영역도 점차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의 시대는 서비스 요금이 없고, 법적 수수료나 지연이 없는 디지털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현상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다.[17]

일본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수단으로 공식 인정하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관련 규제를 재정비해 왔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변적 영역이다. 각 국가는 세부 시장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규제 도입이 특정 국가에서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다.[18] 정부는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거래에 관한 합법화 조치와 필요한 규제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해 나아가야 한다.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 정책은 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민간과 더불어 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는 일본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해당 영역의 과세표준이 기본적으로

5) 동 법안의 정식명칭은 「情報通信技術の進展等の環境変化に対応す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다.

제시됨과 동시에 관련 분야 보험, 펀드 등 부가제도가 발전하고 있다. 이는 추후 다른 국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때 표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 산업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 유치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REFERENCES

- [1] H. J. Kim, "The Future of IT: Blockchain technology and Crypto currency policy," in *Proceedings of the 4t Asia Workshop IT Convergence of KIICE 2018*, Busan, Korea, pp. 140-142, 2018.
- [2] J. K. Lee, "An Exploratory Case Study of Distributed Ledger Processing Using IBM Bluemix Blockchain," *Korean Computers and Accounting Review*, vol.15, no. 1, pp. 25-38, Jun.2017.
- [3] K. J. Jang, "The A Study on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of Business Model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The e-Business Studies*, vol.18, no.6, pp. 113-130, Dec. 2017.
- [4] A. Goto. (2014, October). Guidelines for Bitcoin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IT Strategy Commemoration Committee [Internet]. Available: <https://btnews.jp/bitcoin-document-014/>.
- [5] CCN. Japan Passes Bill to Regulate Bitcoin Exchanges [Internet]. Available: <https://www.ccn.com/japan-passes-bill-regulate-bitcoin-exchanges/>.
- [6] Japan Blockchain Association [Internet]. Available: <http://jba-web.jp/>.
- [7]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Promotion Trends for Expansion of Virtual Currency in Japan [Internet]. Available: <https://www.fsec.or.kr/common/proc/fsec/bbs/42/fileDownload/463.do>.
- [8] IRS,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Virtual Currency Is Treated as Property for U.S. Federal Tax Purposes; General Rules for Property Transactions Apply [Internet]. Available: <https://www.irs.gov/newsroom/irs-virtual-currency-guidance>.
- [9] Bitflyer [Internet]. Available: https://bitflyer.jp/?ns=ad01_google_gsem-brand-x_bf.
- [10] J. H. Won, "Characteristics of Virtual Currency and Desirable Regulatory Direction," *Issues and Point*, vol.1361, pp. 1-4, Dec. 2017.
- [11] Kyunghyang Biz. Bitcoin institutionalize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ternet]. Available: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2091747011.
- [12] Bitflyer [Internet]. Available: https://bitflyer.jp/?ns=ad01_google_gsem-brand-x_bf.
- [13] CCN. Japan's Largest Bank to Launch Digital Currency in 2017 [Internet]. Available: <https://www.ccn.com/japan-mufg-coin-digital-currency-2017-launch/>.
- [14] Jamie Redman. Japan Dominate Bitcoin Landscap [Internet]. Available: <https://news.bitcoin.com/japan-dominate-bitcoin-landscape/>.
- [15] Coindest. Japan's Fisco Launching \$2.66 Million Cryptocurrency Fund [Internet]. Available: <https://www.coindesk.com/japans-fisco-launching-2-66-million-cryptocurrency-fund/>.
- [16] Japan Economic Daily. Fiscal to establish Japan's first virtual currency fund [Internet]. Available: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546291009012018EE9000/>.
- [17] T. H. Kim, "A study of digital currency cryptography for business marketing and finance securit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 pp. 365-376, Jan. 2016.
- [18] H. J. Kim, "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pplication of Content Quota System for On-Demand Video Streaming Platform: Focusing on the European Union Response to Netflix,"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22, no.9, pp. 1191-1198, Sep. 2018.



김현정(Hyun-Jung Kim)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
국제학박사

※ 관심분야 : 유럽연합 공동정책, 지역협력, 국제정치경제